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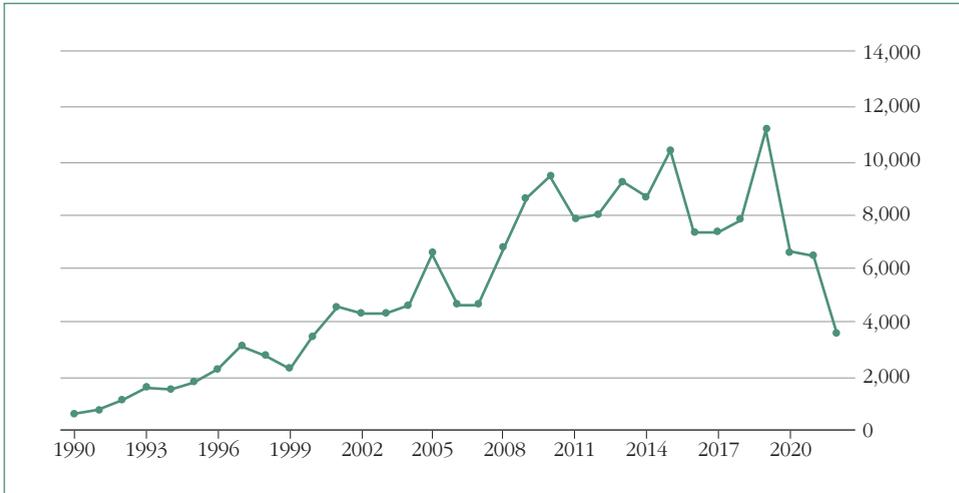
동아시아론을 넘어 동아시아에 직면하기

강상규 지음, 『동아시아 역사학 선언: 근대 동아시아에 나타난 역사적 전환들』(에피스테메, 2021)을 읽고

김인수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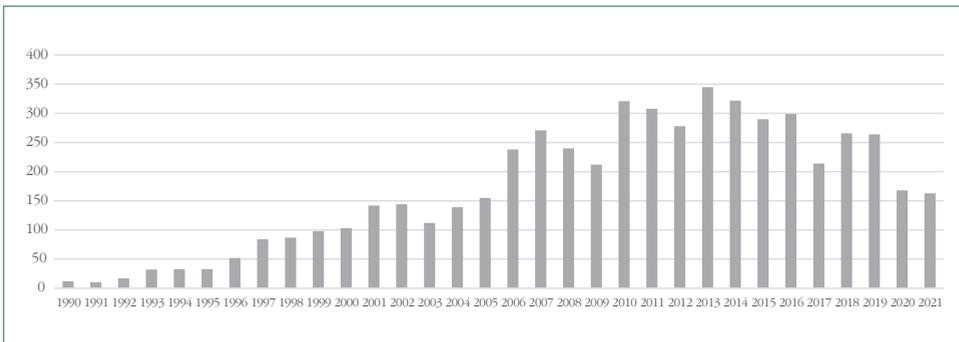
I. 동아시아론의 쇠퇴

21세기 초두, 한국에서는 동아시아론이 풍미했다. 2002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균형자’로서의 정체성을 제시했던 것을 많은 이들이 기억한다. 당시 ‘동아시아’로 지칭되는 권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누가 무엇을 의제화하여 권역의 경계를 짓고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침략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화해를 구축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창발적인 고민은, 아쉽지만 부족했다. 어쩌면 이것은 고민의 부족이기 이전에 엄혹한 정치현실이 가져온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냉전 유럽의 평화와 열전 아시아의 전쟁이 동시대의 구조를 빚어냈듯이, 유럽의 탈냉전(Post-Cold War)은 아시아의 후냉전(Late-Cold War)의 토대 위에서 보장받았다.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속에서 균형자를 자임하고자 했던 한국 정부의 담대한 기획은,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냉전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고, 또는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변화시키려 했던 성마르고 달픈 정치욕망의 산물이었을지도 모른다. 20여년에 걸쳐 진행된 한국에서의 동아시아론의 부침은, 한반도 이슈를 다루기 위해 한반도 외부의 시야를 도입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과 그 실패를 반영하고 있다. 세계-권역-국가-지역으로 이루어진 단위에서 동아시아(권역 Region)는 주권국가로 구성된 근대 국가간체제의 공리를 상대화하고 해체하기



출처: BIG KINDS(검색일: 2022. 7. 25.).

그림 1 한국 언론기사에서 언급된 "동아시아" 연간 빈도수(1990~2022)



출처: RISS 논문검색(검색일: 2022. 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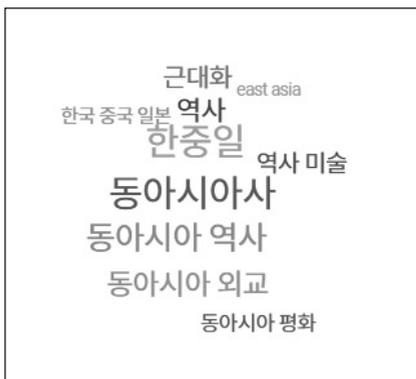
그림 2 국내 학술지 한국어 논문 제목에서 "동아시아" 포함 빈도(1990~2021)

위한 분석도구였지만, 그만큼의 내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최근에 동아시아론은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기사에서 '동아시아'라는 키워드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1). 한국 학계에서 동아시아를 주제와 소재로 삼는 연구물의 수 역시 최근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그림 2).

II. 담론을 재조직하기

이렇듯 『동아시아 역사학 선언』은 동아시아와 관련한 한국의 학계와 대중적인 관심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시점에 출간된 책이다. 학문에 경계가 따로 없었지만,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저자가 역사학을 매개고리로 삼은 점은 이채롭다. 물론, 국내에서 동아시아론이 주로 ‘역사’의 장 속에서 회자되고 제기되었다는 점(그림 3)을 떠올려 보면, 어쩌면 필연적인 개입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저자로서는 대단히 야심찬 기획/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자가 포착하고 분석하여 언급한 내용들은 별다른 이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사실들이다. 저자의 말처럼, 동아시아에는 서로를 묶어 주고 이어 주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보편화된 시각과 공통의 언어가 부재하고 이것은 대단히 문제적인 상황이다. 동아시아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문제들을 국가들 또는 시민사회의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은 매우 취약하다. 동아시아 각국과 각 사회 곳곳에 침투한 반지성주의, 혐오와 차별의 감정은 일상의 정치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흘러나오는 내러티브들은 국내에서만 유통되고 내부자들끼리만 소비될 뿐, 국경을 넘어서면 곧바로 넌센스가 되어 버린다. 이런 속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책임과 책무성 같은 정치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근원적 물음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저자가 잘 분석하고 있듯이, 여기에는 일종의 자기기만, 이를테면



출처: RISS 논문검색. 검색일: 2022. 7. 25.

그림 3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동아시아” 연관어

서구 기준을 수용하고 거기에 발맞추려는 시도, 동양적 전제와 정체성이라는 오랜 콤플렉스와 자기멸시, ‘서양의 충격’과 문명화를 절체절명의 사명으로 설정한 근대 일본의 행보와 그로부터 파생된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저자의 논의는 ‘이미 충분히 검증된 사실들’에 기초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진부하다. 저자는 전작을 통해 이미 근대 동아시아의 문명 전환의 다양성과 다층성에 주목해 왔고, 3장까지의 논의는 이를 요약하고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다. 새로움은 시기구분에 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역사학’ 선언에 값한다. 이를 조금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본문 56쪽 참고).

저자의 시대구분 속에서, 제1기(19세기 후반)는 아편전쟁(1840)에서 청일전쟁(1894)에 이르는 시기로, 세계사적으로 진행된 ‘서양의 팽창’에 의해 동아시아 안에서 문명기준이 역전되어 버렸다. 제2기(20세기 전반)는 청일전쟁(1894)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전(1945)에 이르는 시기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중요한 사건이었다. 저자는 이 시기를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 전쟁’의 시대로 명명한다. 제3기(20세기 후반)는 일본의 패전(1945)에서 냉전의 종언(1991)에 이르는 시기로서, 저자는 이를 ‘동아시아 전후체제’로 이름 붙였다. 마지막으로 제4기(21세기 초반)는 탈냉전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대로서, 저자는 동아시아 전후체제가 임계점에 도달한 시대로 본다. 임계점이란 다름이 아니라, 탈냉전 이후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던 한반도 분단, 중국-대만의 양안관계, 평화헌법과 미일동맹 등 동아시아의 전후 지역질서의 기본골격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감겨 들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저자의 이러한 시대구분은 그 자체로 근대 동아시아의 150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현재’가 어떤 역사적 시간 속에 자리하고 있는지 정확히 지시하는 미덕을 가진다.

III. 진부하나 여전히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어떤 아쉬움

저자가 제기한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 전쟁(1894~1945)”과 “동아시아 전후체제”라는 개념은 그동안의 동아시아론이 가진 한계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논

의를 해 갈 수 있는 일종의 토대, 지침, 방법이 될 수 있다. 시간을 재구획하고 재조직하려는 저자의 문제의식이 엿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하여 담았다는 점에서) 매우 진부한 내용들을 담았으며, 개념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새로운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책의 저류에 흐르는 주체, 이른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여전히 일본이 자리하고 있다는 인상 때문이다. 이 책은 언뜻 시간에 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간론이다. 일본이 (용성이든 쇠퇴든) 주역이 되었던 근대 동아시아의 시간이 구획의 기준이 되어 있고, 제국 일본의 팽창과 수축이 논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조금 기계적이고 저자에게는 다소 부당한 언급일 수도 있지만, 문명전환기를 다룬 3장까지의 서술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저 나름의 역할을 통해 역사를 구축해 가는 주체성이 돋보이는데 이하의 부분에서는 그러한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경계와 심상 지리에서 일본이 유난히 도드라지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한 중국내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은 보조적으로 의미화되거나 아예 시야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이런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오히려 저자가 인상적으로 제시한 데에 그친 ‘동아시아 전쟁체제’(‘전쟁이 새롭게 만들어 낸 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구성을 시도해 본다면 어떨을까? 전쟁은 주권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종종 사회체제의 비가역적 전환도 야기한다는 점, 특히 동아시아 각 사회가 마주해 온 총력전(Total war)이야말로 그 추동력이자 지속력이자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던져 보고 싶다.

이 책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문구가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일본의 사상』에서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수용을 일러 한 말인데, “이론으로서의 진부하되 실천으로서의 참신”하다는 아이러니이다. 동아시아론이 이미 이론적으로는 진부해진 상황에서 저자가 다시 꺼내든 ‘동아시아 역사학 선언’이 가진 실천적인 힘에 좀 더 기대를 걸어 보고 싶다.

